

문 대통령 '평화협정 로드맵' 관철...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새로운 평화가 열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협정 로드맵'의 뼈대가 '4·27 판문점 선언'에 담겼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정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한다는 구상이 선언문에 명시됐다.

남북 정상은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기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또 전문에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적시했다. 전문을 통해 사실상의 종전을 선언하고 3조에서 '종전 선언'을 명시하는 형태를 띤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한 이른바 '10·4 선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10·4 선언 제4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

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10·4 선언에서 사용된 '정전체제 종식'이라는 다소 불명확한 표현이 '종전 선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었고,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를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

문 대통령은 앞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가 풀려 나가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 나가야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남북 대화만 갖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북미·북일 관계 등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야 남북 관계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미 3자·남북미중 4자회담 적극 추진

문 대통령의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의 이투고 이를 발판으로 정전협정 체결 주체인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평화협정 로드맵'이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는 남북 간 종전선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향후 전망되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에서의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되는 등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 꿴다고 할 수 있다.

도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다만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합의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외교상 타국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잘되는 것만

2018 남북정상회담
4·27 판문점 선언 주요내용

- 남북 관계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공동번영지구통일 미래
 -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스스로 결정 '민족 자주 원칙' 확인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쌍방 당국자 상주)
 -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 및 교류 확대, 접촉 활성화
 - 6.15 비핵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민족공동행사 적극 추진
 -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8.15 이산가족 친척 상봉 진행
 -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 적극 추진,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공동 노력**
 -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등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 중지 및 철폐
 - 비무장 지대-- 실질적 평화지대
 - 사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어로 활동 보장
 -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중 정상급 군사회담
-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협력**
 -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 재확인, 엄격히 준수
 - 단계적 군축 실현
 - 올해 종전 선언 및 정전협정-- 평화협정 전환
 -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
 -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공동 목표 확인

양 정상 정기적인 회담, 직통전화 통해 수시로 논의
문재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방문

(그래픽=뉴스1 제공)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북미 관계도 풀려야 되고, 북일 관계도 풀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야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남북 정상이 전쟁을 끝낸다는 수준까지 선언할 수 있던 데에는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북미 회담의 '짐집다리' 성격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협상의 폭이 다소 넓어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상호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전개될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가능성 있는 남북·남북미중 등 정상회담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앞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들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채택 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오늘 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다"며 "김 위원장의 통근 결단으로 남북 국민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 누릴 새 시대를 열어 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다"며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남북 경협' 언급...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선결조건 '주목'

이산가족, 8·15 계기로 만나다

남북 정상이 27일 회담에서 남북 경협(또는 개성공단)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선결 조건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24일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경협이 언급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판문점 선언에 경협과 관련된 포함된 것이다.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남측의 5·24조치, 미국 등 각국의 독자적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공동선언문 적극 추진 내용 담겨

먼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살펴보면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채택된 결의안 2375호와 2397호가 있다.

결의안 2375호와 2397호는 원유 공급을 연 400만 배럴로 동결하고 정유 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북한 섬유제품의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산 광물 자원과 해산물 수입도 금지하고 대북합작 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등도 포함됐다.

특히 여기엔 핵·미사일 자금 전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 제공 금지 조항도 들어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결의안 내용 중 하나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조치와 대북독자제재에는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북한 선박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도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과 금융기관, 북한과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주고받는 제3국, 제3자까지 제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나온 독자 제재에는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지 180일 안에는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EU도 독자적으로 개인

50명과 단체 9곳에 대한 여행금지과 재산동결 등의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5·24조치와 대북 독자 제재는 국내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진일보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 등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관련 국가들이 완화를 제안한다면 이산가족 표결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재 수준을 낮춰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관련국들의 독자 제재는 각국 의회 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선언문에서 '이산가족 친척상봉' 문제를 8·15를 전후로 진행키로 결정, 올해 안에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은 이날 오후 평화의 집 1층 로비에서 남북 정상이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고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이 중 1항 5조에 "남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 친척상봉 등 제반문제를 협의한다"며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

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 15일 전후로 하려면 지금 한 3~4개월 남았으니 그 전에 적십자 실무자회담 등 접촉을 몇 차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북한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후 2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9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뉴스1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